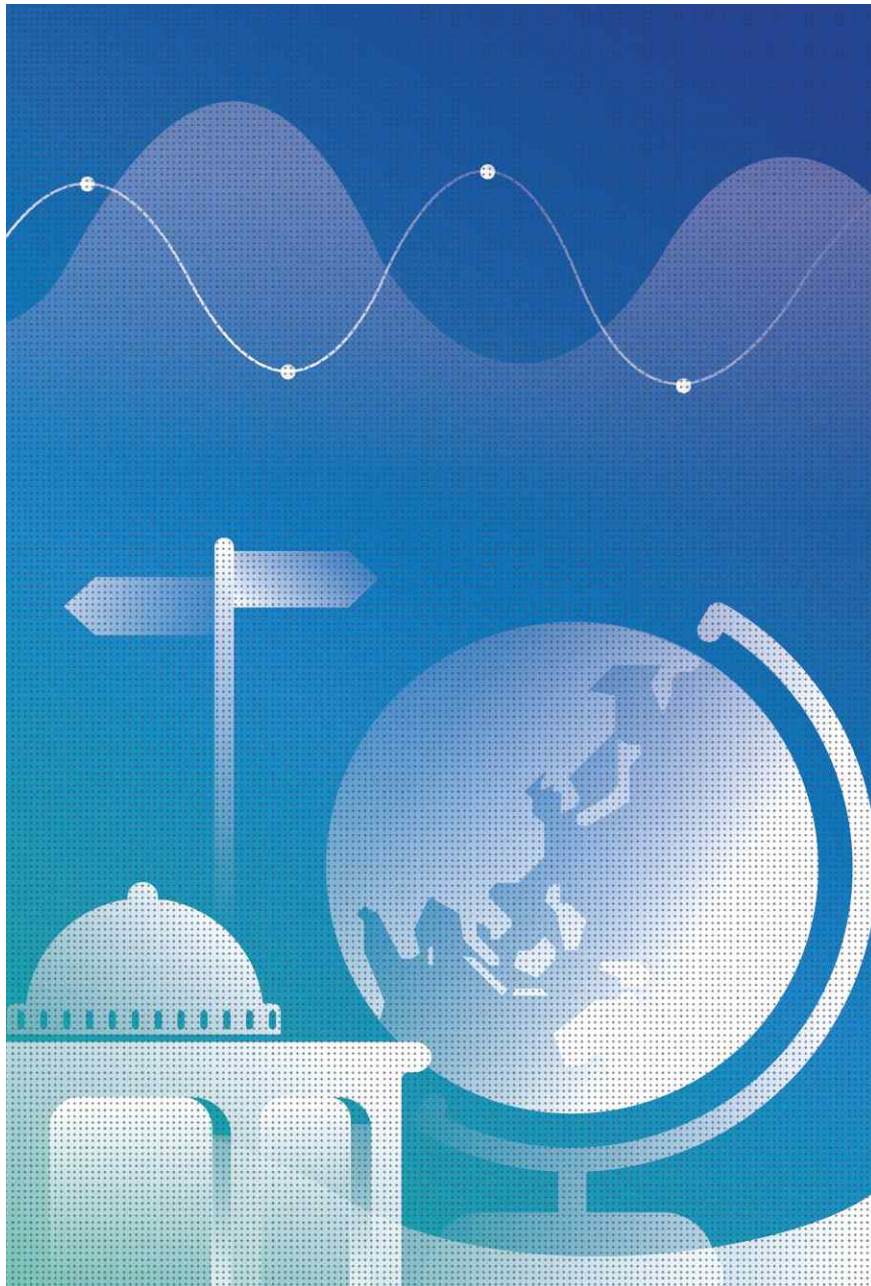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19-지역이슈-3(2019.10)

브렉시트 협상 이후 EU 시장의 수출환경 분석



CONTENTS

I. 분석 배경

II. 한-EU 수출동향

III. EU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

IV. EU 시장의 위협요인 및 시사점

작성

수석조사역 조양현 (6255-5704)

yhjo@koreaexim.go.kr



요 약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재연장

2016년 6월의 국민투표 이후 시작된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이 당초 예정된 **2019년 10월 31일**의 기한을 넘기고 **3개월 이내 추가연기(연장기한: 2020년 1월 31일)** 결정

한-EU 수출동향

브렉시트 협상이 본격화된 2016부터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비중은 10% 미만 수준을 기록했으나, 우리나라의 **EU 주요 6개국**(독일-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폴란드-프랑스)의 수출비중이 2016~2018년 중 EU 전체의 56.3%를 차지한 가운데, EU 시장의 역내무역 비중은 수출 64%, 수입 63% 수준으로 EU 역내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

EU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

EU 경제권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매우 변동적인 경제 성장 추이를 보였는데, 2017~2018년에는 평균 2%대로 경제성장세가 다시 둔화되더니 2019년 이후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생산 및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평균 1% 대의 경기둔화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의 2019년 경제성장률은 ▲독일 0.5%, ▲영국 1.3%, ▲네덜란드 1.6%, ▲이탈리아 0.1%, ▲폴란드 4.4%, ▲프랑스 1.3%로 추정되면서 경기침체 우려

EU 시장의 위험요인 및 시사점

EU 시장의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전망, ▲미-중 및 미-EU 무역분쟁 등 국제 무역환경 악화, ▲유로존(Eurozone)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통화가치 하락추세, ▲영국 정부채권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전염효과이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제성장 회복 및 소득수준 향상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EU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대 EU 투자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상황

I. 분석 배경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 경제권에 대한 심층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

-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 2020년 1월 31일 기한의 추가연기 결정
-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48.1% 반대)으로 브렉시트가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30일 영국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에 EU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한 이후 6월 19일부터 시작된 브렉시트 협상([박스 1] 참조)이 3년 4개월이 지난 2019년 10월 28일, 3개월 이내 추가연기 결정
- * 영국 의회가 2019년 10월 22일에 의결한 "브렉시트 이행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 WAB)이 곧이어 실시된 동 법안 의사일정의 신속처리 계획안(programme motion) 부결로 브렉시트는 영국 의회에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은 채, EU-27 회원국이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
- 2019년 7월 23일 집권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의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존슨(Boris Johnson) 총리가 "미합의 브렉시트"(No Deal Brexit)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10월 31일 기한의 "미합의 브렉시트"에 대해 하원이 9월 4일 부결하면서 존슨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고, 9월 9일 이후 상원은 브렉시트에 대한 필요한 입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EU 집행부와 재협상 추진
- * 존슨 총리는 EU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0월 17일 이전에 조기총선을 제기했으나, 제1야당인 노동당(Labour Party) 코빈(Jeremy Corbyn) 대표가 10월 31일 기한의 "미합의 브렉시트" 방안이 법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한 조기총선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국민투표 실시 제외)
- 2019년 10월 17일, 영국 의회는 무소속의 레트윈(Oliver Letwin) 의원이 제기한 수정안(영국 정부가 EU 정상회의간 브렉시트 합의안 상정요건 보류,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실행법안 제정 후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의결)에 대해 가결(찬성 322, 반대 306)되었고,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벤 법안(Benn Act)(일명 "No Deal 방지법")을 EU(집행위원회)에 송부한 상태
- * 2019년 9월 3일, 벤(Hilary Benn)·루커(Lord Rooker) 의원이 주장한 벤 법안(2019년 9월 9일 의결)에 따르면, 10월 말 기한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의회가 의결하지 못하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기한을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로 규정

[박스 1] 영국의 EU 탈퇴협상 경과

- 2017년 3월 30일, 영국 정부(메이(Theresa May) 총리: 2016년 7월 13일~2019년 6월 7일 재임)가 2년의 협상 시한(EU 리스본조약 50조)이 발동되면서 EU 집행부와 브렉시트 방법에 관하여 급진적인 EU 탈퇴("Hard Brexit") 또는 점진적인 EU 탈퇴("Soft Brexit") 등 지난한 협상 진행(2017년 6월 19일 브렉시트 협상 시작, 2018년 11월 25일 EU 특별정상회의 브렉시트 협상 서명)
-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의향투표(2019년 3월 12일)에서 제2국민투표, EU 관세동맹 잔류하며 브렉시트, EU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 잔류, 공동시장 2.0 가입, 브렉시트 취소, 미합의 브렉시트("No Deal Brexit"), 현 상태 유지, 유럽경제지대(EEA) 가입에 관한 8개 안건에 대해 모두 부결(2019년 4월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시한을 2019년 10월 31일로 연장 합의하며 영국의 의회 합의안 의결즉시 탈퇴 결정(2019년 4월 11일) 등 추진)
- 2019년 7월 23일 집권 보수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존슨 총리가 미합의 브렉시트를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지난 9월 3일, 영국 의회(하원)는 브렉시트를 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찬성 328, 반대 301)함으로써 EU 정상회의 개최 직후인 10월 19일 기한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영국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3개월 추가연기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보내기로 합의
- 2018년 11월, EU가 제기하고 영국 정부(메이 총리)가 합의한 북아일랜드에 대한 관세동맹 잔류방안(backstop) 대신, 2019년 10월 22일에 개최된 영국 의회에서, 존슨 총리의 수정안(북아일랜드에 대한 영국 및 EU의 관세 체제 이중적용)에 대한 신속처리 계획안이 부결되고, 2020년 1월 31일 기한의 3개월 이내 추가연기 결정

- 2019년 10월 31일 기한의 브렉시트 수정안(북아일랜드에 대해 2025년 기한 EU 관세동맹 적용, 4년마다 EU 관세동맹 탈퇴여부 결정)에 대해 2019년 10월 17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이후 10월 22일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이행법안”이 영국 의회에서 의결(찬성 329, 반대 299)되었으나, 동 법안의 신속처리 계획안 부결(찬성 308, 반대 322)로 브렉시트 시행시기는 연기된 상태
- * “브렉시트 이행법안”의 주요 내용: 전환기간 설정, 영-EU FTA 협상, WAB의 적용우선 및 준수여부 모니터링, EU 재정분담금 지급문제, 북아일랜드의 EU 규준적용(backstop 대체) 방안, EU 근로자의 권리 등 영국 국내법으로의 시행 법제화
- 2019년 10월 19일에 개최된 영국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 의회에서는 상정하지도 못한 채,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내용이 EU 집행위원회에 발송(3개월 연장서한 포함)되었고, 10월 21일의 재차 상정안도 버커우(John Bercow) 하원의장이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불허하였으나, 존슨 총리가 제기한 12월 12일 총선실시안에 대해 10월 29일, 하원(찬성 438, 반대 20) 의결
- EU 시장의 최대 악재로 작용한 브렉시트 현실화로 EU 정책운용의 최대변수로 부각
- 영국의 EU 탈퇴로 EU 회원국이 27개국으로 축소될 경우, 브렉시트 실행방안에 따라 EU 시장 등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상이한 파장 예상
- * 1973년 덴마크-아일랜드와 동시에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EEC는 1986년 유럽공동체(EC), 1992년 유럽연합(EU)으로 거듭나면서 EU는 확대과정을 진행했으나, 2013년 1월 23일 캐머런 총리가 영국의 EU 탈퇴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브렉시트 협상이 EU 시장의 주요 안건으로 대두
- “미합의 브렉시트” 시행에 따른 정치경제적 충격은 산술적으로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EU 탈퇴로 인한 영국에 대한 외국인기업(금융기관 포함)의 투자 축소 및 영업망 이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가계지출 위축 및 통화(파운드) 가치 하락(수입물가 상승), ▲무역(글로벌 공급사슬 등) 및 금융 거래 감소, ▲국경선 통과비용 상승(통관절차, 상품재고 등)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 우려
- 영국이 EU에 잔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유럽경제지대(EEA) 수준에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EU와의 결별 수준(WTO 기준적용)의 단계로 접근할수록 영국은 EU의 유럽단일시장(European Single Market: ESM)과의 무역 및 투자의 통합 수준(접근성)은 약해지고, 영국-EU 무역장벽은 더 높아지는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박스 2] 참조), 영국과 EU는 “미합의 브렉시트”를 방지하기로 하고, 점진적인 EU 탈퇴(FTA 수준의 협상 등)를 통해 경제적 손실은 최대한 억제하는 데 합의
- * 브렉시트 예상 시나리오: “점진적인 EU 탈퇴”(유럽단일시장(ESM) 통합형태: EEA-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EFTA(스위스) 수준의 FTA(EU 정책 준수, 상품·노동시장 통합형태, 서비스시장 포괄적 준용 불허), 터키 수준의 관세동맹(EU 정책 준수, 상품시장 통합형태), 캐나다 수준의 FTA(상품시장 통합형태), “급진적인 EU 탈퇴”(MFN 시장 접근: WTO 조건-미국, 일본 등) 등

[박스 2]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무역과 투자의 접근성 비교

	EU 회원국 (EU Membership)	유럽경제지대 (EEA)	자유무역협정 (FTA)	WTO 기준적용 (WTO rules)
상품 수입관세 (Tariffs on Goods)	철폐 (None)	철폐 (None)	철폐 (None)	높은 수준 (High)
비관세 무역장벽 (NTBs on Trade)	철폐 (None)	낮은 수준 (Low)	중간 수준 (Medium)	높은 수준 (High)
외국인투자 유입 (Inward Investment)	지속적 유입가능 (Continued Mobility)	지속적 유입가능 (Continued Mobility)	일부 제한 (Some Restrictions)	노동이동 엄격제한 (Strict Labour Mobility)
회원국내 이민 수용 (EU Migration)	이민 가능 (High)	불변 (Unchanged)	불변 (Unchanged)	이민 곤란 (Reduced)

자료: IMF, “United Kingdom: Selected Issue”, November 2018.

II. 한-EU 수출동향

1.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실적

-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비중 하락추세: 9.41%(2016) → 9.42%(2017) → 9.54%(2018)
- 2016~2018년 기간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각각 4,954억 달러, 5,737억 달러, 6,049억 달러인데,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실적은 각각 466억 달러(우리나라 총수출의 9.41%), 540억 달러(9.42%), 577억 달러(9.54%)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비중은 10% 미만 수준
- * 2016~2019년(1~9월) 기간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각각 -5.9%, +15.8%, +5.4%, -9.8%이고 이중 대 EU 수출증가율은 각각 -3.1%, +15.9%, +6.7%, -3.5%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반면, 동 기간 중 영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14.9%, +29.2%, -21.7%, +6.6%로 연도별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표 1] 참조)

[표 1] 우리나라의 EU 시장 수출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2015	2016	2017	2018	2019. 1~9
총	수	출	526,757	495,426	573,694	604,860	406,104
EU	수	출	48,079	46,610	54,038	57,676	40,198
그	리	스	1,313	2,718	1,628	978	1,301
네	덜	란	4,024	3,821	4,649	4,775	3,278
독		일	6,220	6,443	8,484	9,373	6,464
라	트	비	86	63	66	66	52
룩	셈	부	13	11	19	28	17
리	투	아	264	308	310	306	273
몰		타	2,194	653	660	961	698
벨	기	에	2,023	2,426	2,795	3,246	2,107
스	페	인	2,171	2,329	2,791	3,027	2,145
슬	로	바	3,543	2,926	2,773	2,719	1,721
슬	로	베	1,626	1,656	1,913	1,888	1,377
아	일	랜	366	565	693	650	438
에	스	토	62	62	78	93	70
오	스	트	882	840	959	1,077	646
이	탈	리	3,531	3,163	3,758	4,493	2,958
키	프	로	27	784	765	1,391	30
포	르	투	529	436	459	579	368
프	랑	스	2,581	2,468	2,995	3,541	2,544
핀	란	드	309	330	297	332	225
덴	마	크	1,417	333	1,496	1,094	322
루	마	니	539	559	432	483	414
불	가	리	108	135	137	174	120
스	웨	덴	699	804	896	1,047	796
체		코	2,040	2,176	2,212	2,452	1,627
크	로	아	300	448	328	241	206
폴	란	드	2,807	2,912	3,116	4,334	3,723
형	가	리	1,016	953	1,206	1,967	1,812
영		국	7,390	6,288	8,122	6,359	4,464

자료: <http://www.kita.net>.

-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주요국의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세계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실적은 전년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주력 수출산업의 수출실적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 * 2019년 1~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4,061억 달러, 대 EU 수출실적은 402억 달러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9.8% 및 -3.5% 감소한 상태
- 2019년 1~9월에는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수출실적이 독일-영국-네덜란드-폴란드-이탈리아-프랑스 등의 순으로 많았으나 대부분 전년에 비해 수출실적이 저조했으며, 헝가리-폴란드 등 중동부유럽 지역에 대한 수출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의 EU 시장에 대한 수출실적 추이: 주요 6개국의 수출비중 56.3%(2016~2018)**
- 2016~2018년 기간 우리나라의 EU 시장에 대한 수출실적(표 2 참조) 추이를 살펴보면, 독일-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폴란드-프랑스에 대한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이들 6개국의 수출비중은 2016~2018년 누계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의 56.3% 수준
- 2016년 6월 이후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우리나라의 EU 주요 수출시장(수출 변동성)에 미친 효과는 불확실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영국에 대한 수출실적은 2016년과 2018년에는 감소한 반면, 2017년과 2019년(1~9월)에는 증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 EU 및 대 영국 수출실적 증감률과 비교해 보면, 2016~2017년에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지만, 2018~2019년(1~9월)에는 디커플링 현상 발생
- 2016~2018년 기간 우리나라의 주요 EU 수출시장 가운데, 2017년에는 독일-영국-네덜란드-프랑스-이탈리아 등이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증가율 평균치(+15.9%)를 상회했고, 2018년에는 폴란드-이탈리아-프랑스-독일 등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증가율 평균치(+6.7%)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기간 중 우리나라는 독일과 폴란드에 대해 지속적인 수출증가세 시현

[표 2] 우리나라의 EU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15	2016		2017		2018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독 일	6,220	6,443	+3.6	8,484	+31.7	9,373	+10.5
영 국	7,390	6,288	-14.9	8,122	+29.2	6,359	-21.7
네 덜 란 드	4,024	3,821	-5.0	4,649	+21.7	4,775	+2.7
이 탈 리 아	3,531	3,163	-10.4	3,758	+18.8	4,493	+19.6
폴 란 드	2,807	2,912	+3.7	3,116	+7.0	4,334	+39.1
프 랑 스	2,581	2,468	-4.4	2,995	+21.3	3,541	+18.2
벨 기 에	2,023	2,426	+19.9	2,795	+15.2	3,246	+16.1
슬 로 바 키 아	3,543	2,926	-17.4	2,773	-5.2	2,719	-1.9
스 페 인	2,171	2,329	+7.3	2,791	+19.8	3,027	+8.5
체 코	2,040	2,176	+6.6	2,212	+1.7	2,452	+10.8

자료: <http://www.kita.net>.

- 2016~2018년 누계기준으로 우리나라의 EU 경제권에 대한 주요 수출산업(누계실적): 자동차(202억 달러), 선박(155억 달러), 자동차부품(130억 달러), 합성수지(77억 달러), 축전지(53억 달러), 집적회로반도체(45억 달러), 건설 중장비(37억 달러), 평판디스플레이(34억 달러), 의약품(31억 달러) 등
- * 우리나라가 선박, 디스플레이 및 무선통신기기 산업은 수출시장에서 EU에 대해 비교 우위적인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선박 및 자동차 등이 EU 시장에서도 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의 대 EU 시장별 수출산업(2016~2018년 수출실적 누계기준)을 살펴보면, 독일(우리나라의 13대 수출대상국)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및 의약품, 영국(16대 수출대상국)은 조선, 자동차(부품) 및 항공기부품, 네덜란드(24대 수출대상국)는 석유제품, 기계 및 자동차, 이탈리아(25대 수출대상국)는 자동차, 합성수지 및 선박해양구조물, 폴란드(27대 수출대상국)는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부품), 프랑스(29대 수출대상국)는 자동차(부품) 및 축전지 등으로 분석

2. EU 무역동향

- EU 시장의 무역추이(2016~2018): 수입실적은 수출실적의 98% 수준,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 상회
- 2016~2018년 기간 EU 시장의 무역규모를 살펴보면, 수출([표 4] 참조)은 2016년 4조 8,615억 유로(전년 대비 +0.4%), 2017년 5조 2,316억 유로(전년 대비 +7.6%), 2018년 5조 4,765억 유로(전년 대비 +4.7%)로 나타난 반면, 수입([표 5] 참조)은 2016년 4조 7,528억 유로(전년 대비 +0.7%), 2017년 5조 1,403억 유로(전년 대비 +8.2%), 2018년 5조 4,283억 유로(전년 대비 +5.6%) 수준 형성
- * 2016~2018년 기간 중 EU의 무역규모 증가율은 각각 +0.3%, +7.9%, +5.1%이나, 수출증가율은 각각 +0.4%, +7.6%, +4.7%를 기록한 반면, 수입증가율은 각각 +0.7%, +8.2%, +5.6%로 나타나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순 수출(수출-수입) 규모는 매년 수입실적보다는 수출실적이 소폭 이나마 큰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EU의 경제성장에는 소폭의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
- EU 경제권의 주요 수출대상국(지역)은 독일-프랑스-미국-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벨기에-중국-스페인-폴란드 등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지역)은 독일-네덜란드-중국-프랑스-벨기에-미국-이탈리아-영국-스페인-폴란드 등으로 나타나 미국-중국을 제외하면 EU 역내 국가와의 무역비중이 높은 편([표 3] 참조)

[표 3] EU 무역규모의 국가비중 비교

단위: %

2015		2016		2017		2018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독일 12.72	독일 14.16	독일 12.84	독일 14.42	독일 12.88	독일 14.28	독일 12.96	독일 14.13
미국 7.57	네덜란드 7.62	프랑스 7.62	네덜란드 7.61	프랑스 7.61	네덜란드 7.83	프랑스 7.39	네덜란드 7.88
프랑스 7.56	중국 7.43	미국 7.40	중국 7.25	미국 7.08	중국 7.29	미국 7.32	중국 7.26
영국 6.44	프랑스 5.77	영국 6.37	프랑스 5.70	영국 6.08	프랑스 5.52	영국 5.76	프랑스 5.39
네덜란드 4.48	미국 5.20	이탈리아 4.61	미국 5.19	이탈리아 4.64	벨기에 5.08	네덜란드 4.73	벨기에 5.07
이탈리아 4.43	벨기에 5.12	네덜란드 4.52	벨기에 5.18	네덜란드 4.56	미국 4.95	이탈리아 4.67	미국 4.90
벨기에 4.23	이탈리아 4.55	벨기에 4.19	이탈리아 4.65	벨기에 4.18	이탈리아 4.64	벨기에 4.21	이탈리아 4.62
중국 3.47	영국 3.80	스페인 3.58	영국 3.70	중국 3.75	영국 3.77	중국 3.80	영국 3.56
스페인 3.47	스페인 3.26	중국 3.47	스페인 3.40	스페인 3.56	스페인 3.40	스페인 3.55	스페인 3.33
스위스 3.08	폴란드 2.87	폴란드 2.93	폴란드 3.01	폴란드 3.00	폴란드 3.07	폴란드 3.06	폴란드 3.12

자료: <http://www.kita.net>.

[박스 3]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출-수입 산업비중
(2018년 기준)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기 계 류	17%	13%	15%	13%	13%	12%	20%	10%	13%	12%	12%	13%
자 동 차	17%	10%	11%	11%		6%	8%	10%	11%	10%	10%	11%
전기전자 부품	11%	12%		10%	10%	13%	6%	8%	11%	11%	8%	9%
광 물 연 료		9%	9%	10%	14%	18%		14%		9%		11%
의 약 품	6%	5%	6%		5%		5%	5%			6%	
광 학 기 기	5%				6%	5%						
플 라 스틱							4%		5%	6%		4%
금 속			10%									
귀 금 속				6%								
항 공 기											9%	
가 구									6%			

자료: <http://tradingeconomics.com>.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출-수입 산업비중(2018년 기준)을 살펴보면([박스 3] 참조), 독일-영국-네덜란드-이탈리아-폴란드-프랑스에서는 기계류,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 및 의약품 등의 산업에서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데 비해, 수입 측면에서는 기계류,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 및 광물연료 등의 산업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 EU 시장의 역내무역 비중: 수출 64%, 수입 63% 수준
- 2016~2018년 기간 EU 무역규모에서 역내 수출비중은 각각 64.1%, 64.1%, 64.3%인데 비해, 역내 수입비중은 64.1%, 63.9%, 63.6% 수준으로 역내 무역비중은 3년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EU 회원국간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수출은 점진적인 증가추세, 수입은 점진적인 하락추세)

[표 4] EU 주요국(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의 수출실적 추이

단위: 억 유로

	2015		2016		2017		2018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독 일	6,928	5,030	7,058	4,997	7,500	5,320	7,787	5,421
영 국	1,842	2,305	1,756	1,945	1,864	2,045	1,941	2,181
네 덜 란 드	3,896	1,247	3,925	1,234	4,343	1,427	4,563	1,568
이 탈 리 아	2,260	1,863	2,334	1,839	2,503	1,988	2,606	2,023
폴 란 드	1,424	371	1,468	374	1,659	415	1,772	434
프 랑 스	2,687	1,878	2,693	1,838	2,785	1,952	2,908	2,019
벨 기 에	2,565	1,013	2,591	1,007	2,751	1,063	2,877	1,073
슬로바키아	580	99	599	102	640	107	684	114
스 페 인	1,656	890	1,750	870	1,876	955	1,933	988
체 코	1,186	208	1,229	240	1,352	260	1,445	268
E U	30,693	17,904	31,160	17,455	33,526	18,790	35,200	19,565

자료: <http://ec.europa.eu/eurostat>.

- 2018년 기준으로 EU 주요국(수출입실적 순)의 역내 수출비중([표 4] 참조)은 독일 60.0%, 네덜란드 74.4%, 프랑스 59.0%, 이탈리아 56.3%, 영국 47.1%으로 나타나 네덜란드-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EU 회원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크며, 역내 수입비중([표 5] 참조)은 독일 66.4%, 영국 52.8%, 프랑스 69.1%, 네덜란드 45.8%, 이탈리아 59.0%으로서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의 EU 회원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큰 것으로 분석
- 2016~2018년 중 EU 시장에서 영국의 주요 거래상대국은 EU 회원국인데, 영국 수출실적의 47%는 EU 역내거래(주요 수출산업: 자동차, 기계·금속, 연료, 의약품 등)인데 비해, 영국 수입실적(주요 수입산업: 기계·금속, 자동차, 연료, 전기전자 부품 등)의 52%는 EU 역내거래에 따른 것으로 집계
- 영국의 주요 무역상대국(2018년 기준)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미국 14.0%, 독일 10.2%, 네덜란드 7.4%, 프랑스 6.8% 등이고, 수입의 경우 독일 14.0%, 미국 10.0%, 중국 9.6%, 네덜란드 8.6% 등으로 나타나 영국은 독일-미국-네덜란드-중국-프랑스와의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

[표 5] EU 주요국(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의 수입실적 추이

단위: 억 유로

	2015		2016		2017		2018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역내	역외
독 일	6,216	3,260	6,323	3,214	6,822	3,474	7,225	3,660
영 국	3,028	2,617	2,906	2,843	2,954	2,742	3,016	2,692
네 덜 란 드	2,117	2,501	2,123	2,405	2,338	2,746	2,499	2,962
이 탈 리 아	2,174	1,531	2,233	1,443	2,416	1,599	2,503	1,737
폴 란 드	1,253	519	1,305	497	1,483	585	1,565	692
프 랑 스	3,556	1,590	3,588	1,543	3,814	1,666	3,934	1,759
벨 기 에	2,126	1,260	2,186	1,242	2,336	1,287	2,455	1,356
슬로바키아	521	141	547	135	588	149	638	158
스 페 인	1,708	1,104	1,739	1,072	1,860	1,256	1,920	1,365
체 코	985	290	1,018	274	1,128	317	1,197	367
E U	29,960	17,252	30,463	17,065	32,851	18,552	34,499	19,784

자료: <http://ec.europa.eu/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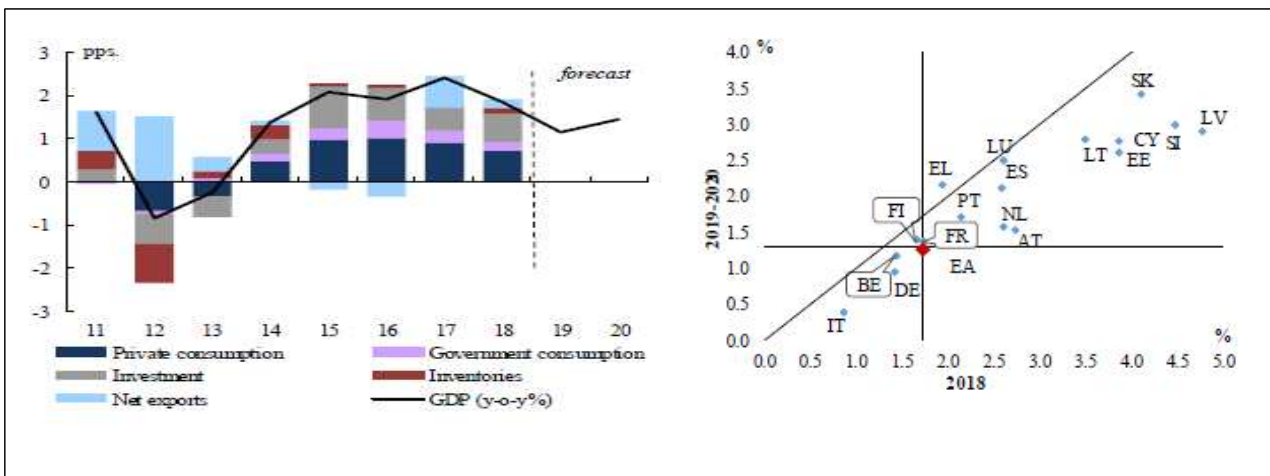


III. EU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

1. EU 시장의 경제성장 개관

- EU 경제권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상당히 변동적인 경제성장 추이를 보였는데, 2017~2018년 평균 2%대의 경제성장률 시현
- 글로벌 경제위기로 EU 경제권은 2009년 평균 -5.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실물경기도 2009~2012년 중에는 침체국면이었는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Quantity Easing: QE) 등 금융시장 유동성 지원 등으로 2014년부터 실물경기는 회복추세이나, EU의 잠재성장률(2017년, ±1.4%)은 아직 저조한 수준
- * EU 경제권은 무역거래 및 소비심리 위축, 노동생산성 저하 등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 및 고용 창출 등으로 2017년에는 평균 2.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2.2%로 다소 둔화되었고 2019~2020년에는 1%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침체 우려([그림 1] 참조)

[그림 1] 유로존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July 2019.

- 유로존은 2017~2018년 중 민간소비를 기반으로 각각 2.5% 및 1.9%의 경제성장세를 시현했으나, 2019년 이후 생산 및 투자 위축, 대내외 정세 불안 등으로 경기둔화세 지속
- 유로존(유로를 법정통화로 사용하는 EU-19개국)은 2018년 중 내수 회복(소비지출 확대), 고용 증가, 양적 완화(QE) 등 금융여건 호전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평균 1.9%의 경제성장률 달성
- * 예를 들면, 가처분소득이 지난 10년 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제조업 공장가동률은 2008년 이후 최고치에 근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건설신뢰지수도 1990년 초반 이후 30년 내 최고 수준
- 2019년에는 투자 위축(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해외수요 감소(글로벌 경기둔화)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수입관세 인상) 강화로 인한 무역 축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은 평균 1.2% 수준으로 예상되며, 특히, 미-중 및 미-EU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



[표 6] EU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E U	2.1	2.8	2.2	1.5	1.6
Euro Zone	1.9	2.5	1.9	1.2	1.4
독 일	2.2	2.5	1.5	0.5	1.2
프 랑 스	1.1	2.3	1.7	1.2	1.3
이 탈 리 아	1.1	1.7	0.9	0.0	0.5
스 페 인	3.2	3.0	2.6	2.2	1.8
네 델 란 드	2.2	2.9	2.6	1.8	1.6
벨 기 에	1.5	1.7	1.4	1.2	1.3
영 국	1.8	1.8	1.4	1.2	1.4
신 흥 유 럽	1.8	3.9	3.1	1.8	2.5
폴 란 드	3.1	4.9	5.1	4.0	3.1
체 코	2.5	4.4	3.0	2.5	2.6
형 가 리	2.3	4.1	4.9	4.6	3.3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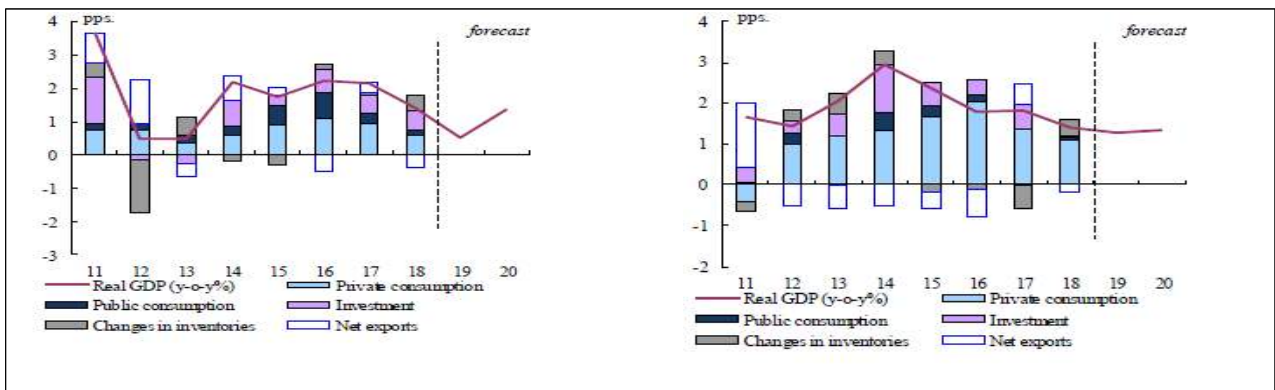
- 2019년 중 EU 지역에서는 수출 증가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미합의 브렉시트") 가능성, 이탈리아 적자 예산안 편성에 대한 EU내 갈등 등으로 인해 경기부진
- EU 시장의 중심국가인 유로존 경제는 2018년 말 양적 완화 종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어 내수(민간소비)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수요 감소와 산업생산 위축(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하락추세), 투자환경 악화 등으로 2019~2020년에는 1%대의 경제성장률이 예견됨에 따라 경기부진([표 6] 참조)
-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전반적으로 국제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대됨에 따라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며, 2019년 10월 IMF도 연차총회를 통해 유로존 경제성장률을 2019년 1.2%, 2020년 1.4% 수준으로 전망

2. 우리나라 주요 수출시장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

- 독일: 2.5%(2017) → 1.5%(2018) → 0.5%(2019) → 1.2%(2020)
- 유로존 최대 경제권인 독일(내수·수출 기반)은 확대재정정책 시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산업생산 부진으로 2018~2019년에는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내수는 임금 인상(노동시장 개혁), 연금지급 증가, 낮은 차입비용 등으로 가계지출(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
 - * (2017~2018년) 가계소비 증가율은 1.8%/1.6%, 투자 증가율은 2.9%/3.1%, 재정지출 증가율은 1.6%/1.3%, 수출 증가율은 4.6%/2.8%([그림 2] 참조)
- 또한, 산업 생산능력 한계와 숙련 노동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기술 투자 및 주택공급에 대한 건설투자 등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독일의 제조부문의 대외경쟁력은 수출 산업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분석

- 다만,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노선과 이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으로 무역이 위축되면서 독일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들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로 인한 자동차(부품) 산업(독일 GDP의 4%, 수출의 15%)의 생산 및 수출 감소와, EU 역내 경기부진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 등으로 생산과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양상(2019년 9월 기준 제조업 PMI: 41.7 수준)
- * 2019년 경제성장 부진요인: ▲해외수요 감소(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 스웨덴 및 터키(독일 수출의 17% 차지)의 경기 둔화 및 수입 감소 등), ▲자동차 산업의 생산 위축(자동차 판매시장의 부진, 전기 자동차-공유시스템-배출가스 규제 등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등)
- 영국: 1.8%(2017) → 1.4%(2018) → 1.2%(2019) → 1.4%(2020)
- 2018년 영국의 경제성장이 저조한 이유는 기상이변의 영향 이외에도 내수 부진에 기인하며, 고용 증가로 인한 소비 지출이 늘어났지만 가계의 높은 차입비용과 저축률 하락,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지출여력은 약화되고 있는 상황
- * (2017~2018년) 가계소비 증가율은 1.8%/1.4%, 투자 증가율은 3.3%/-0.1%, 재정지출 증가율은 -0.1%/0.5%, 수출 증가율은 5.7%/2.1%([그림 2] 참조)
- 특히 브렉시트 협상과정과 현실화에 따른 우려 등이 실물경제에 반영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통화(파운드) 가치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경기침체 가시화
- *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물가 상승, 실질소득(임금) 하방 압력, 투자 지연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는데,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고용 증가율이 둔화되고 미래 경제전망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 증대와 더불어 예비적 저축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한 상태

[그림 2] 독일-영국의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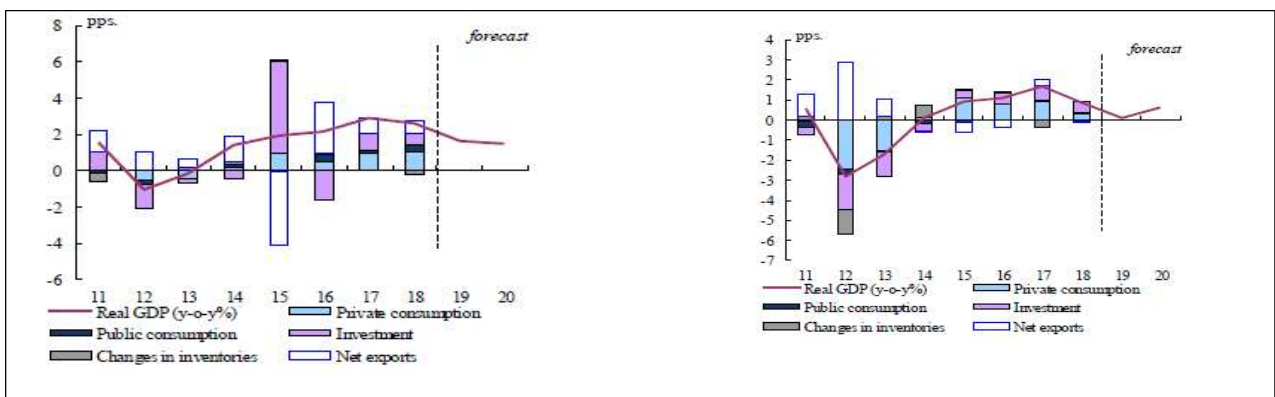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9) (좌측: 독일, 우측: 영국).

- 네덜란드: 2.9%(2017) → 2.6%(2018) → 1.8%(2019) → 1.6%(2020)
- 네덜란드는 매우 개방적인 구조인데다 무역·투자 의존도(2018년 기준 GDP의 155%)가 높기 때문에, 주변국들에 비해 글로벌 경제상황에 민감하고 상당히 변동적인 경제 성장패턴 형성([그림 3] 참조)
- 따라서 내수 경기의 회복은 소비보다는 기업들의 투자와 더불어 유로존의 수입수요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2019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억제 및 소비자 신뢰지수 악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유로존 역내 무역상대국(독일)의 경제성장 둔화(무역거래 위축) 및 해외수요 부진, 주택경기 위축 및 건설 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 등으로 경기 둔화추세

- 더구나 네덜란드는 영국과의 무역 및 금융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어 브렉시트 현실화로 네덜란드의 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이며, 미국에 의한 EU산 자동차 수입관세 부과 등 미-EU 무역 긴장관계도 네덜란드 경제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 네덜란드에서 주택시장과 관련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주택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고, 아직도 높은 수준의 가계채무 때문에 소비지출의 증가 또한 제한받고 있는 상황
- 이탈리아: 1.7%(2017) → 0.9%(2018) → 0.0%(2019) → 0.5%(2020)
- 이탈리아는 산업생산 증가, 내수경기(조세 인하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및 소비 지출) 회복 등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안과 금융시장 변동성 등으로 EU 경제권에서도 저성장군에 속해 있는데,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이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소비심리도 정치 불안에 따라 위축되었고 공공투자 감소, 체감경기 부진, 금융대출 규제 등으로 기업투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
- * (2017~2018년) 가계소비 증가율은 1.5%/1.0%, 투자 증가율은 4.3%/3.7%, 재정지출 증가율은 -0.1%/0.0%, 수출 증가율은 5.7%/1.6%([그림 3] 참조)
- 특히 2018년 3월 총선 이후 집권한 오성운동(Movimento Cinque Stelle: M5S)과 동맹(Northern League: Lega) 및 민주당(Partito Democratico: PD)과의 연립정권 출범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이탈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투자심리(이탈리아 정부채권 가격 급락, 조달금리 상승) 등은 우려되고 있는 상황
- * 2019년 8월 극우세력인 동맹의 살비니(Matteo Salvini) 대표(부총리)가 오성운동(대표: Luigi di Maio)과의 연정종식 선언과 콘테(Giuseppe Conte) 총리(오성운동 대표)에 대한 불신임안 의회제출(8월 8일), 콘테 총리의 사임(8월 20일)으로 연립 정부가 붕괴(의회 해산)되고, 또 다른 연정인 중도좌파(친 EU 성향)의 민주당의 렌찌(Matteo Renzi) 상원의원(2014~2015 총리 역임, 민주당 전임대표)이 탈당하면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탈리아의 혼란스러운 정국 지속
- 이탈리아(장기 저성장 기조)는 고용 증가율 둔화, 해외수요·국제무역 위축과 (선진국)경기 순환적 침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증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공공투자가 억제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높은 (기업)채무 상환부담과 차입비용(조달금리), 외부 위협요인, 정치 불안(정부 신용등급 하락) 등이 이탈리아 투자증가 및 경제성장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
- * 콘테 총리는 엄격한 이민·안정보장 정책 시행, EU 재정기준 반발, 연금·노동개혁 지연, 개인소득세 인하,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해 재정지출 증가(2019년 재정수지/GDP 적자 비중: -2.04% 수정제출)에 역점을 두면서 2019년 정부 예산안(재정지출 확대방침)을 둘러싸고 EU와의 갈등 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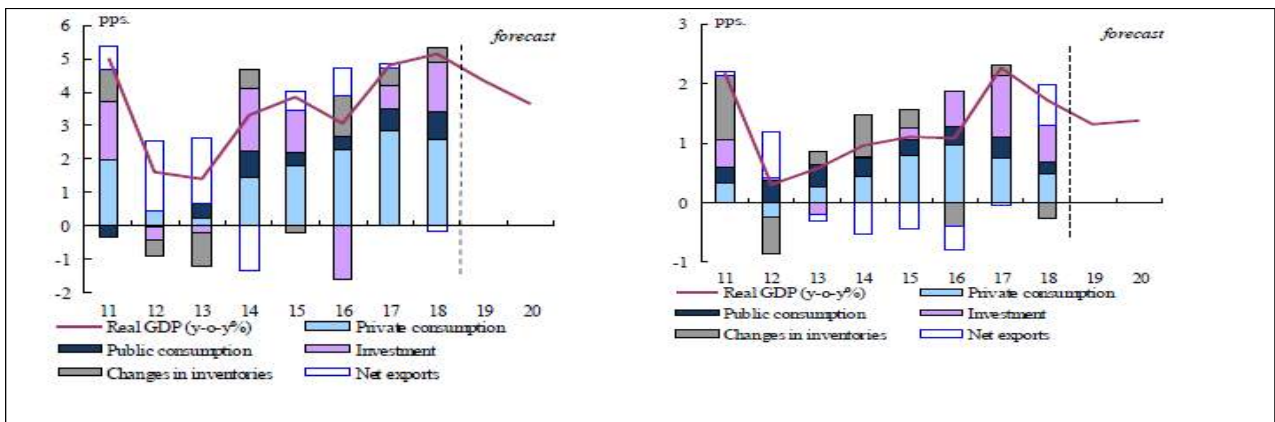
[그림 3] 네덜란드-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9) (좌측: 네덜란드, 우측: 이탈리아).

- 폴란드: 4.9%(2017) → 5.1%(2018) → 4.0%(2019) → 3.1%(2020)
- 신흥유럽(Emerging Europe) 최대 경제권인 폴란드의 경우 2018년에는 퇴직연금 개혁 및 연금지급 증가, 가처분소득 증대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대, EU 기금 유입으로 인한 투자 지속 등으로 내수의 전반적인 호조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세 시현([그림 4] 참조)
 - * 2014년 5월 EU 가입 이후 SOC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EU 기금 지원)가 활기를 띠면서 산업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3월 이후 기준금리가 1.5%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지출 및 연금지급 증가, 임금 상승, 소비자신뢰지수의 지속적 유지 등으로 당분간 내수 경기가 경제성장 견인
- 2019년에는 산업생산 및 투자 제약(노동 부족현상), 해외수요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증가하면서 유로존 평균을 상회하는 4% 대의 경제성장 추정(폴란드의 무역파트너: 상품수출의 80% EU, 58% 유로존, 2018년 기준 폴란드의 수출상대국: 독일 28% 등)
 - * 폴란드의 3위 수출시장(2018년 기준 수출의 6.2%)인 영국의 브렉시트 현실화, 미-중 무역 분쟁 심화 및 미국의 경기 순환적 침체국면 진입의 경우 폴란드의 수출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프랑스: 2.3%(2017) → 1.7%(2018) → 1.2%(2019) → 1.3%(2020)
- 고용증가 및 사회보장세 감면에 따른 구매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및 내수 위축, 기업투자 정체 등으로 전년에 이어 2019년에도 경제성장 둔화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의 경제개혁으로 노동시장 자유화, 재정지출 합리화(억제), 유동적인 (노르딕 모델)사회보장시스템 구축, 이민제도 개정 등에 대해 대중의 개혁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
 - * (2017~2018년) 가계소비 증가율은 1.0%/1.1%, 투자 증가율은 4.5%/2.7%, 재정지출 증가율은 1.3%/1.2%, 수출 증가율은 4.5%/3.4%([그림 4] 참조)
- 프랑스는 산업 전반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경쟁력 개선 조짐이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2000년대 이후 단위 노동비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평가 기준에 의한 노동생산성은 비교적 높은 편이고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자유화 및 소득세 인하 등은 프랑스의 대외경쟁력 및 외국인투자 유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 프랑스의 경제성장은 수출보다는 내수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2019년에도 가처분소득 증대(실질임금 상승, 고용 증가)에 따른 가계지출 증가 등에 민간소비가 성장 동력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미국의 EU산 자동차 수입관세 인상, 브렉시트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그림 4] 폴란드-프랑스의 경제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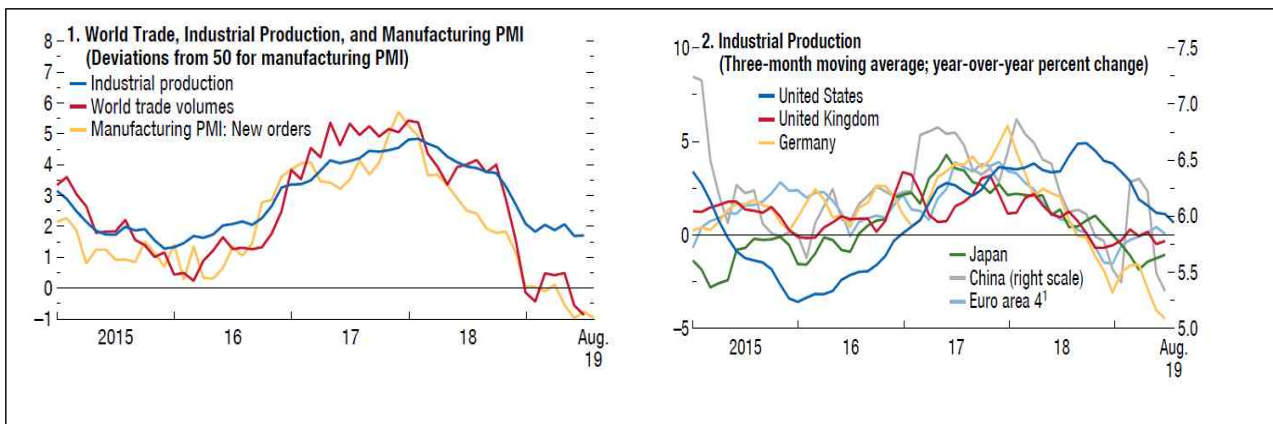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9) (좌측: 폴란드, 우측: 프랑스).

IV. EU 시장의 위협요인 및 시사점

1. EU 시장의 위협요인

- 2019~2020년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전반적으로 둔화 예상
-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이후 2018년 말부터 세계 전역에 걸쳐 제조부문의 생산 위축, 무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무역규모가 축소되고, 국제협력과 무역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기업의 투자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신뢰도지수 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
- 선진국 및 신흥경제권에서의 수입수요 위축에 따른 산업생산 부진, 기후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규제 등으로 인한 생산(자동차제조 등) 차질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추세 시현([그림 5] 참조)

[그림 5] 세계 무역, 산업생산 및 PMI 추이



자료: IMF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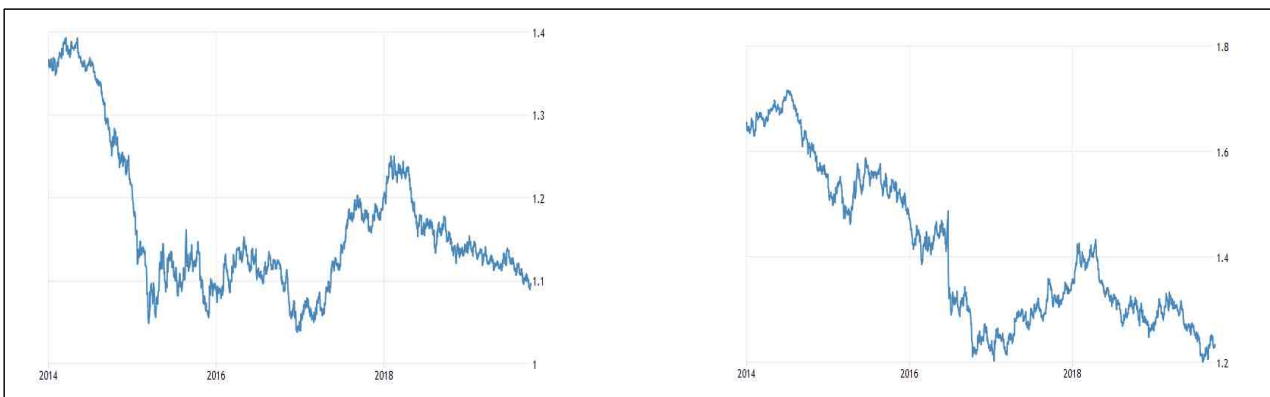
- 미-중 및 미-EU 무역분쟁 등 국제 무역환경 악화
-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2018년 7월 6일 시행) 및 환율조작국 지정(2019년 8월 5일),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등에 따른 미-중 무역분쟁([박스 4] 참조),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포토 레지스트(감광액),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로오린 폴리이미드)의 포괄수출허가를 개별수출허가로 전환(2019년 7월 4일 시행) 및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운용에서의 화이트국가 리스트 제외(2019년 8월 28일 시행) 등으로 우리나라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태
- 또한, 미국은 30억 달러의 EU산 수입품(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및 10%의 수입관세 부과(2018년 4월), EU는 28억 유로의 미국산 수입품(버번위스키·오토바이)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2018년 6월), 미국은 112억 달러의 EU산 수입품(에어버스·자동차)에 대해 최고 25%의 수입관세 부과예고(2019년 4월 8일), EU는 102억 유로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준비 등으로 미-EU 무역분쟁([박스 4] 참조)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0월 2일에는 미국이 EU산 제품에 대해 수입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고 EU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

[박스 4] 미-중 및 미-EU 무역분쟁 경과

미-중 무역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USTR)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2018년 3월 22일 관세부과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그해 미국과 중국은 각각 326억/338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818개/545개 품목)에 대해 상호 25% 관세 부과(2018년 7월 6일 시행) - 미국/중국은 136억/141억 달러 수입품(279개/333개 품목)에 대해 상호 25% 관세 부과(2018년 8월 23일 시행) - 미국은 1,905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5,745개 품목)에 대해 10%, 중국은 534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5,140개 품목)에 대해 5~10% 관세 부과(2018년 9월 24일 시행),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2019년 5월 10일 시행) 및 30%로 상향조정(2019년 8월 23일 발표, 10월 15일 시행보류), 미국은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미부과분)에 대해 최고 25%의 관세 부과예고(2019년 5월 13일), 중국은 60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5~10%에서 5~25%로 확대적용(2019년 6월 1일) - 미국은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3,805개 품목)에 대해 15% 관세 부과(2019년 9월 1일 시행, 2019년 12월 15일 추가관세 부과예고), 중국은 75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5,078개 품목)에 대해 5~25%(원유 10%, 콩 5%) 관세 부과(2019년 9월 1일 시행, 2019년 12월 15일 추가관세 부과예고),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관세(2019년 12월 15일 부과예고)
미-EU 무역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분쟁(2004년 미국의 제소)을 시작으로 미국(USTR)은 2018년 6월 1일, EU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 및 10%의 수입관세 부과에 대해 EU는 6월 22일, 미국산 특산품(리바이스 청바지, 할리데이브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등)의 수입품목(32억 달러, 28억 유로)에 보복관세 부과 (7월 25일, 미국과 EU는 관세부과 잠정 적용배제 합의) - 미국(USTR)은 2019년 2월, EU산 등의 수입차(부품)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정(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수입차 등에 최고 25%의 수입관세 부과 검토 - WTO는 2019년 10월 2일,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1968~2006년, 180억 달러)을 WTO 규정위반 조치로 판정(불법보조금으로 EU 패소, 75억 달러 한도에서 최고 100%의 수입관세 부과허용), 미국은 EU산 항공기 및 농산물·공산품(스코틀랜드 위스키, 프랑스 와인, 독일 와플, 이탈리아 올리브) 등의 품목에 대해 각각 10% 및 25%의 수입관세 부과발표(10월 18일 부과예고), EU(집행위원회)는 미국의 보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WTO에 이미 제소한 상태(2020년 판결예상), 10월 15일 미-EU 무역협상 예정

- 유로존 경기침체 및 브렉시트 협상 이후 통화(유로/파운드) 가치 하락추세
- 유로존의 미달러/유로 (연평균)환율은 2015~2016년에는 1.11 수준에서, 2017년에는 1.13(+1.8% 강세), 2018년 1.18(+4.4% 강세)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2019년 10월 이후에는 1.10(-6.8% 약세) 수준을 밀돌고 있는 상태([그림 6] 참조)
- * 우리나라 원/미달러 (연평균)환율: 1,131(2015) → 1,106(2016) → 1,130(2017) → 1,100(2018)

[그림 6] 유로-파운드 환율(미달러) 추이



자료: <http://tradingeconomics.com/currencies> (좌측: 유로 환율, 우측: 파운드 환율).

- 브렉시트 당사자국인 영국의 통화(파운드) 가치는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정 이후 하락추세를 보였는데, 미달러/파운드 (연평균)환율은 2015년 1.53 수준에서 2016년 1.35(-11.8% 약세), 2017년 1.29(-4.4% 약세)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2018년에는 1.33(+3.3% 강세) 수준을 형성하다가 2019년 9월 이후에는 1.23(-7.5% 약세) 수준으로 하락추세 지속([그림 6] 참조)
- 영국 정부채권(국가위험)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전염효과 우려
 - 2016년 3월 이후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영국 정부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이 하락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통화(파운드) 가치급락 및 금융거래포지션 악화, 경제정책의 효과성·안정성·예측가능성, 투자·소비 심리 및 거래 위축으로 인한 성장 둔화, EU와의 무역거래 축소 등을 우려하면서 AAA/N에서 AA/N으로 하향조정(2016.6)([표 7] 참조)
 - * S&P는 영국 정부채권 신용등급을 AA/N로 재평가하면서, 무질서한 브렉시트(미합의 브렉시트 등)가 단기적으로 영국 경제의 소득수준, 경제성장, 정부재정, 대외금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경상수지 적자(2018년 말 1,100억 달러(GDP의 3.9%):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규모)를 외국인직접투자(금융부문: 3분의 2 차지)보다는 포트폴리오투자를 통한 적자 보전도 브렉시트 이후 악화 우려
 - 무디스(Moody)는 영국의 유연하고 대외경쟁력을 보유한 경제구조, 공고한 제도적 기반, 장기 국내채무 위주의 제한적 채무구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브렉시트 협상 난항, 재정·대외거래 상황 악화, 생산성·가계부채 취약성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Aa1/S에서 Aa1/N(2016.6), Aa2/S(2017.9)로 하향조정([표 7] 참조)

[표 7] 우리나라의 EU 주요 수출시장의 정부채권 평가등급 비교
(2019년 10월 31일 기준)

		2015년 이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독 일	S & P	AAA/S(2012.1)				
	Moody's	Aaa/S(2014.2)				
영 국	S & P	AAA/N(2015.6)	AA/N(2016.6)			
	Moody's	Aa1/S(2013.2)	Aa1/N(2016.6)	Aa2/S(2017.9)		
네덜란드	S & P	AAA/S(2015.11)				
	Moody's	Aaa/S(2014.3)				
이탈리아	S & P	BBB-/S(2014.12)		BBB/S(2017.10)	BBB/N(2018.10)	
	Moody's	Baa2/S(2014.2)	Baa2/N(2016.12)		Baa3/S(2018.10)	
폴란드	S & P	A-/P(2015.2)	BBB+/S(2016.12)		A-/S(2018.10)	
	Moody's	A2/S(2002.11)	A2/N(2016.5)	A2/S(2017.5)		
프랑스	S & P	AA/N(2014.10)	AA/S(2016.10)			
	Moody's	Aa2/S(2015.9)			Aa2/P(2018.5)	

자료: <http://tradingeconomics.com/country-list/rating>.

2. 시사점

-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대책 강구
 - 2019년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해 무역분쟁(미-중, 미-EU 및 한-일)으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등의 무역 제한조치가 취해지면서 세계 전역에 걸쳐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른 생산 및 투자 위축으로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될 전망
 - * 미-중, 미-EU 무역분쟁의 결과, 수입관세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무역 감소)뿐만 아니라 무역전환 및 산업재조정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투자·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발생
 -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제 무역·금융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대상 국가·산업의 다변화 추진, 산업경쟁력 제고, 경제성장 동력 발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인 EU 경제권에 대한 수출전략 등 재검토 필요
 - * 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면, 2019년 8월 22일에 체결된 한-영 FTA(한-EU FTA(2011년 7월 잠정발효, 2015년 12월 공식발효) 양허 수준의 상품관세 적용, EU산 원산지의 3년간 한시적 인정 등)에 대해 의회비준(10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EU FTA의 재연장 기한종료 이후 한-영 FTA 발효·적용 등에 관한 시행준비 등을 통해 EU 시장 축소로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만회 필요
-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요건: EU 등 주요 수출시장의 경제성장 회복 및 소득수준 향상
 - 2019년 1~9월,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4,061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9.8%)로 수출증가율은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수출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도 2019년 8월 이후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하면서 소비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
 - * 경제성장을 위해 내수경기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수출 증대를 통한 성장 유인을 도출해야 하지만, 글로벌 무역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쉽지 않은 상태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은 중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 미국, EU 등의 지역이나, 이중 EU에 대한 수출비중은 좀처럼 10%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EU 주요국(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의 경제회복을 통한 경제성장, 구매력 증대를 통한 수입수요 확대 등이 요구되는 시점
 - * GDP 및 1인당 GDP 기준으로는 폴란드(2015~2018년 GDP: +22.7%, 1인당 GDP: +20.9%) 등지의 소득수준 및 구매력이 증가하고 있어 중동부 유럽지역에 대한 수출시장을 추가 발굴 필요([표 8] 참조)

[표 8] EU 주요국(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의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 추이

단위: (억)달러

	2015		2016		2017		2018	
	GDP	1인당GDP	GDP	1인당GDP	GDP	1인당GDP	GDP	1인당GDP
독 일	33,590	47,353	34,620	49,284	36,690	52,054	38,280	53,209
영 국	28,980	41,869	26,690	42,853	26,420	44,446	28,290	45,046
네덜란드	7,658	50,423	7,837	51,499	8,342	54,684	9,148	56,506
이탈리아	18,319	30,903	18,707	39,041	19,528	40,932	20,754	41,486
폴란드	4,773	26,567	4,717	27,463	5,265	29,714	5,858	32,127
프랑스	24,390	42,187	24,710	43,448	25,930	45,664	27,820	46,764

자료: <http://ec.europa.eu/eurostat> (1인당GDP: PPP 기준).



• EU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대 EU 투자관리 필요

- 2016~2018년 기간 EU/영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규모는 2016년 5,561억/1,961억 달러, 2017년 3,406억/1,012억 달러, 2018년 2,776억/645억 달러로 2016년 영국에 대한 FDI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동 기간에 걸쳐 EU에 대한 FDI 유입증가율도 2016년 -12.5%, 2017년 -38.8%, 2018년 -18.5% 시현([표 9] 참조)
- 동 기간 중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verseas Direct Investment: ODI) 규모는 2016년 396억 달러, 2017년 446억 달러, 2018년 498억 달러인데, 이 중 EU/영국에 대한 ODI 실적은 30억/9억 달러, 58억/14억 달러, 99억/25억 달러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EU 시장에 대한 투자비중(영국은 우리나라의 대 EU 투자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7.7%(30.7%), 2017년 13.0%(23.9%), 2018년 19.9%(25.3%)로 수출에 비해 오히려 상승추세([표 9] 참조)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 기업의 EU 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태([표 9] 참조)

[표 9] EU 및 영국에 대한 투자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15		2016		2017		2018	
	FDI	ODI	FDI	ODI	FDI	ODI	FDI	ODI
영국	39,186	294	196,132 (+400.5)	936 (+218.4)	101,238 (-48.5)	1,378 (+47.2)	64,487 (-36.3)	2,515 (+82.5)
EU	635,840	2,482	556,118 (-12.5)	3,049 (+22.8)	340,570 (-38.8)	5,777 (+89.5)	277,640 (-18.5)	9,926 (+71.8)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및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직접투자통계".

☐



참고문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stat>(검색일: 2019.9.11).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tats.koreaexim.go.kr/odisas.html>(검색일: 2019.10.7).
- European Commission, “Country Report”, <http://ec.europa.eu/info/sites/2019-eupen-semester-country-report-en.pdf>(검색일: 2019.9.5).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November 2018, European Economy Institutional Paper 089, pp.9-42.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July 2019, Institutional Paper 108, pp.1-31.
-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Statistics”,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검색일: 2019.9.3).
-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Trade”, <http://ec.europa.eu/eurostat/tgm/printTable.do?tab=table&plugin=1&language=en&pcode=tet00002&printPreview=true>(검색일: 2019.8.16).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September 2019, <http://www.eiu.com/FileHandler.ashx?issue=id?&mode=pdf>(검색일: 2019.9.25).
- IHS Markit, “Country/Territory Report”, September 2019, <http://connect.ihs.com/geography/country-profile/country-risk#>(검색일: 2019.9.30).
- IHS Markit, “Eurozone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19, <http://connect.ihs.com/AkamaiFileDownload.ashx?p=phoenix&p>(검색일: 2019.10.1).
- IMF, “2018 Article IV Consultation: United Kingdom”, November 2018, Country Report No. 18/316, pp. 67-71.
-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Europe – Domestic Expansion Running into External Turbulence”, November 2018,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s, pp.4-8.
- IMF, “United Kingdom: Selected Issue”, November 2018, Country Report No. 18/317, pp.10-11.
- IMF, “World Economic Outlook: Challenges to Steady Growth”, October 2018, World Economic and Financial Surveys, pp.13-67.
- IMF, “World Economic Outlook: Global Manufacturing Downturn, Rising Trade Barriers”, October 2019, pp.1-28.
- Moody’s, “Credit Opinion: United Kingdom”, Moody’s Investors Service, May 2019, pp.1-9.
- S&P, “Ratings Direct: United Kingdom”, April 2019, S&P Global Ratings, pp.1-11.
- Trading Economics, “Credit Rating”, <http://tradingeconomics.com/country-list/rating>(검색일: 2019.10.4).
- Trading Economics, “Market Indicators”, <http://tradingeconomics.com/currencies>(검색일: 2019.10.4).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http://unctad.org/fdistatistics>(검색일: 2019.9.30).